

# 여성 부서관 희롱·모욕 20대, 2심 감형...왜?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선고유예 피해자 위해 공탁한 점·초범인 점 등 고려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

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군 복무 당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모 포병부대 복무 당시인 2020년 2월 후임 5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성 부서관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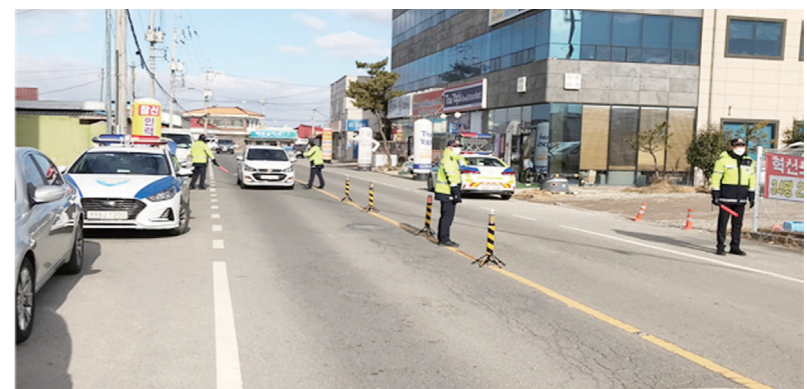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후임들 앞에서 여성 군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부서관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부서관에게 불순한 태

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군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



### 나주경찰,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6일 나주시 남평읍, 왕곡면 일원에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광주전남방병무청,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광주전남지방방병무청(청장 김용우)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양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광주지방보훈청, 고령·무의탁 독거 보훈가족에게 선물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원장 김동규)와 함께 설명절 계기 '사랑의 참치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오유나기자



### 강진소방, 전남최초 김미라 여성 119구조대장 탄생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전남 최초로 여성구조대장으로 김미라 소방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담양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환경개선 홍보 나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대형 판매시설 및 물류창고 등 재난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공간 지하층 피난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 동부소방, 설 명절 대비 '심폐소생술 DAY'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17일 명절 준비를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 “양금덕 할머니 훈장 보류, 日 눈치 본 정부 부처 합심 결과”

###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기자회견 열고 인권상 반납 “양 할머니 서훈 의안 제출 않은 이상민 장관 고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도적인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주장을 제기한 지역 교육 단체는 형의 뜻을 담아 과거 수상한 국가인권상을 반납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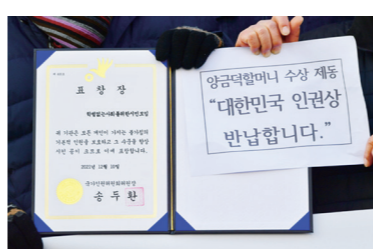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어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의 합심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양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외교부가 (수상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이후 (관련 부처서인) 행안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저야 할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는 취지의 공개토론회를 지난 12일 열었다”며 “사실상 행안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금을 마련,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사안을 이끌고 있다. 행안부의 저 자세·골육 외교가 의심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받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또 양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대법, ‘빌라왕’ 사망에 “상속등기 없이 전세금 반환 가능” 제도 개선

### 기존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 필요 대법 등기·승무 선례 제정해 절차 개선 피해자,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신청 가능

대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집주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무자

본 겹투자를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기존 임대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대위상속등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금액이 소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하고, 대위상속등기가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승무선례를 제정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

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예규)도 개정했다.

이슬비기자



### 설 택배에 분주한 집배원들

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물린 택배를 정리하며 분

## 광주·전남 마트 노동자 “건강권 뺏는 대형마트 규제완화 규탄”

### 마트 노동자 “휴일·야간 장기간 노동 내몰릴 위기”

광주·전남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협약을 두고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이하 마트노조)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상인 모두를 죽이는 ‘살생 협약’을 파기하라”며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해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일부 상인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윤 정부는 나아가 심야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해제는 마트 노동자들을 휴일·야간·장시간 노동에 내몰는 협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정부의 비호 아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밀어 붙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하는 전국 지자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중·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와 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맺었다.

이어 정부와 유통업계도 지난달 28일 대형마트 등이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유통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10년 만에 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은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지난 2012년 시행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매달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재환기자